‘예산안 처리’ 급한 불 끈 與野… 10·29 참사 국정조사 타협

국민의힘, 先 예산안 後 국조 당론
45일간 국조… 본회의 의결로 연장
국회의장, 국조 특위 위원 선임 통보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전격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이후 10·29 참사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경제 위기 극복과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뒷받침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국민의힘은 한숨을 돌렸다. 야당은 여당 협조 없이 단독으로 나서는 부담감을 덜 수 있게 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국정조사 기간과 범위 등 쟁점 현안을 두고 협상한 끝에 타결했다. 국민의힘이 같은 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先 예산안 처리, 後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다시 채택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국조 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정조사 합의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국정조사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처리한 뒤 45일간 하기로 했다.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한 뒤 하기로 했다. 단 본회의 의결로 국정조사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포함) ▲소방청(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용산소방서 포함) ▲서울시(용산구 포함) ▲서울교통공사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하는 기관 등이다.

여야는 국정조사 목적과 범위 등 그 밖의 사항은 본회의에서 승인한 조사계획서에 따르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국정조사 시기, 대상 기관 등을 두고 다퉜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무산될 가능성도 있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 당시 국조 협상에 있어 ‘양보를 많이 하지 말라’는 주문도 했다. 참사 진실을 밝히는 범위 내에서 국조가 추진돼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라는 게 주 원내대표 설명이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先 예산안 처리, 後 국정조사’ 당론 채택에 반발하는 여론도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해서 경찰에 수사권을 줬고 경찰 500명 투입돼 수사하는데, 국정조사라는 게 전부 다 수사 중에는 ‘답변이 곤란하다’는 답변할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조를 정치 쟁점화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위한 다분히 정략적인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없다”며 10·29 참사 국조를 추진하는 시점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국조 관련 협상은 이어졌고, 결국 합의했다. 이와 관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총 모두 발언에서 “지금 예산 국회 막바지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민생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민생·예산·경제”라며 “지금 여야 협상이 진전되고 결론에 도달하는 데 의원들의 지혜와 고민이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조 특위 위원 선임을 각 당에 통보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정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만큼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에 대한 위원 선임 통보가 이뤄졌다.

민주당은 우상호·김교흥·진선미·권칠승·조응천·천준호·이해식·신현영·윤건영 의원 등 9명이다. 정의당은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참여한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론 머스크(Elon Musk) 미국 테슬라·스페이스X CEO와 화상 면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尹, 머스크와 전기차생산·투자 협력 논의

美 테슬라 CEO와 화상 면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테슬라·스페이스X사(社)의 일론 머스크(Elon Musk) CEO와 글로벌 기술 혁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전기차 생산과 관련 한국에서의 투자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23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과 머스크 CEO의 화상 면담이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당초 지난 14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B20 서밋 참석 계기에 머스크 CEO와 만날 예정이었으나, 머스크 CEO의 출장이 취소되면서 화상 면담으로 변경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기차 시대를 개척하고 있는 테슬라사와 세계 최초의 궤도 발사체 재활용 등에 성공한 스페이스X사의 혁신적인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주도해 온 머스크 CEO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성공적인 혁신을 이뤄내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테슬라사가 향후 아시아 지역에 완성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가팩토리(Gigafactory)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들은 후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자동차 산업생태계와 투자 여건을 설명하고 한국에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머스크 CEO는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며 “아시아 후보 국가들의 인력 및 기술 수준, 생산 환경 등 투자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도 테슬라가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관련 분야에서 한국의 우수한 부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과의 공급망 협력도 대폭적으로 확대해 2023년에는 한국 기업으로부터의 부품 구매금액이 약 100억달러(약 1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올해 6월, 독자 기술로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언급하며 “한국이 본격적인 우주경제 시대를 열기 위해 우주·항공 스타트업 육성 및 인력양성,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등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스페이스X사와 한국 우주산업 기업들의 협력도 당부하며 “글로벌 첨단혁신기업들의 한국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개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삼성 찾은 野 “美中경쟁 희생양 안되도록 최선”

민생경제대책위, 두번째 현장 행보
“정부-기업 원팀 돼야할 중대 전환기”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기술 패권 경쟁 시대’ 반도체 업계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방문했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찾은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및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삼성전자 임직원. /김태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이 ‘기술 패권 경쟁 시대’를 맞아 반도체 업계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23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한국 반도체 업계가 기술 패권 경쟁에서 희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이하 민생경제대책위)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이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찾았다. 민생경제대책위가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대한민국 전략산업 반도체 기업 간담회를 가진 뒤 두 번째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태년 당 민생경제대책위 위원장은 “삼성전자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경제 주역”이라며 “초대형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평택 캠퍼스 증설, 기흥 반도체 R&D 단지 조성 같은 삼성의 노력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기가 되어줄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중 패권 싸움의 핵심은 결국 반도체에 달려 있다. 반도체에서 뒤처지면 4차산업혁명 주요 산업 전반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자국 우선주의 리스크를 지혜롭게 극복하려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다변화만이 정답”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야 할 중대한 전환기다. 반도체 설계 기술 갖춘 삼성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졌다”며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반도체 업계가 겪는) 애로 사항을 잘 청취해 삼성전자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미국·중국 기술 패권 경쟁 희생양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최영훈 기자

주호영 “화물연대 파업, 국민 동의 못 받아”

〈국민의힘 원내대표〉

“불법 행위로 인한 법적 책임 져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예고에 “지금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국민 동의를 전혀 받을 수 없다. 이제라도 파업 선언을 거둬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단행하면, 불법 행위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에 “불법 행위에는 한 치 물러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의원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 시국이 엄정한데 화물연대가 내일(24일) 자정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한다. 당정이 안전운임제 시행 시한을 3년 연장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음에도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안전운임제는 핑계였을 뿐, 이미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인 거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2일 긴급 당정협의회를 갖고 화물연대에서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유효기간) 삭제 ▲5가지 품목(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확대 조치와 관련 일부 수용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게 분명하다. 공사 현장을 멈추고 물류 운송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국민 생활에도 심각한 불편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를 겨냥해 주 원내대표는 “비노조원 운송 방해를 위해 폭력과 폭언을 서슴지 않는 불법적 행태가 빈번했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계의 정당한 파업이나 집회는 보장돼야 하나 정치·불법·과격 투쟁은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영훈 기자